

장동혁 '대통령 오찬' 1시간 앞 불참 통보... 멀어지는 협치

국힘, 법사위 사법개혁법 처리 반발...비쟁점법 처리 본회의도 불참 靑 "매우 유감"...민주 "대단한 결례...막무가내식 국회 활동 단호 대처"

청와대에서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은 장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장 대표의 이날 오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불참 결정을 알렸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이며 사법 권력 독점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의 법사위 통과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왜곡된 '병탄 프레임'으로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문금주 원내대변인)며 방어막을 쳤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상임위는 일정과 계획, 절차대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지만 원내 지도부가 따로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에도 장 대표가 불참했던 만큼,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형국이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홍 수석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지방선거 본격화 탓에 당분간 만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장 대표)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적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자기들 마음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며 "국회에 국민이 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상임위를 중단시키고, 본회의까지 불참하는 거냐"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설 명절 앞 '한복 국회' 우원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한복을 입은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수사 의뢰·징계"

안규백 장관, 헌법준중TF 결과 발표...48명 징계요구·75명 경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준중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징계 조

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아울러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7기갑여단장 구상희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중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인무종사와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급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 양정을 판단했다.

헌법준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 지선 공약 발굴단 가동

미래 성장·생활 밀착 중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당사에서 '제1차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열고,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 발굴 및 정책 수립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이번 공약개발단 가동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복합적인 사회 문제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미경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당은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 현장 활동가, 정책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개발단을 꾸렸다.

개발단은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 목은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선심성 공약을 배제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시민 앞에 내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약의 방향은 크게 '미래 성장'과 '생활 밀착' 두 갈래로 잡았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5개 자치구별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맞춤형 생활 공약을 발굴해 바닥 민심을 훑을 예정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공약개발단 출범은 단순히 선거 준비를 넘어 광주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행정통합 등 지역의 핵심 과제를 정교한 정책으로 다듬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카드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희대 "재판소원, 공론화로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구도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외소재)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

국힘 지선 공관위원장에게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맡는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이런 인선안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